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8(금) ~ 2023.12.14(목)

제공일시 2023 12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8(금) ~ 2023.12.14(목)

제공일시 2023 12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PFAS 규제안 실시 임박... 각국 대응품 개발에 속도

- 유럽연합(EU)이 유기 불소 화합물(PFAS)을 폭넓게 규제할 방침을 세우면서 전 세계 관련 기업들이 PFAS 대체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PFAS를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규정(REACH)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PFAS 대체 제품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3M,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미쓰비시케미칼 등이 있음. 한국 기업들도 EU의 PFAS 규제 강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PFAS 규제 강화는 글로벌 소재 업계에 기회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임

(글로벌이코노믹 2023.12.11) 박정환 기자

### 2. EU, AI 규제법 합의... 미 빅테크 정조준

-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벨기에 지난 8일(현지시간) 'AI 규제법'에 합의했음
-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 운영'을 금지했음.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AI'와 '범용 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함
- AI 규제법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임

(매일경제 2023.12.10) 이덕주 기자

### 3. EU 의원들, 각 노동자 권리에 대한 법안 합의

- 우버, 딜리버리 등의 각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EU 의원들이 잠정 합의했음. 채택될 경우 글로벌 최초가 될 예정임
- 새로운 규칙은 '고용 추정'을 도입해 이러한 각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 5개 지표 중 2개를 충족하면 해당 노동자가 회사에 고용돼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칙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고용중개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숙일 수 없음. 중개업체를 통한 직원도 직고용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함

(로이터통신 2023.12.14) 피오토르 리핀스키 기자

### 4. 미국 반도체 지원금 확보 경쟁, TSMC 마이크론 '노조와 협력' 적극 앞세워

-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첫 대상 기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다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조 설립과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인텔과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공장에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공산이 큼

(비즈니스포스트 2023.12.10) 김용원 기자

### 1. 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음
- 환경부는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함.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임
-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함. 2027년까지 전국 훼손 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 복원해 나갈 계획임
- 또,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함

[\(아시아경제 2023.12.12\) 이동우 기자](#)

### 2.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내년 10개 댐 기본구상 착수

-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음
-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요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과 저수지 등 기존 댐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키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함.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함
- 홍수방어 인프라도 늘림. 오는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함
-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도 확립함. 내년부터는 통상적 홍수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 관리함

[\(브릿지경제 2023.12.7\) 박진성 기자](#)

### 3. 실증 특례 기간 ‘2+2’→‘4+2’... 지역 이전 없이도 실증특례 가능

-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이 확대됨
-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장기간 실증이 필요한 사업자들은 기본 4년에 필요 시 2년을 더해 총 6년간 실증특례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음. 법안은 12월 통과가 점쳐짐
- 정부는 기간 확대에 따라 실증 연구개발(R&D) 자금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이데일리 2023.12.11\) 김영환 기자](#)

### 4. 공정위, ‘일자리 창출·소비자 후생 증가’ 위해 규제 걷어낸다

- 앞으로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IoT),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각종 분야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 정부는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규제를 개선함.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야기했던 분야의 규제도 개선함

[\(민주신문 2023.12.7\) 이한호 기자](#)

## 1. MS, AI·슈퍼컴퓨팅 전력 조달에 원전 활용… 소형 원전 승인 작업에는 AI 이용

-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가동과 슈퍼컴퓨팅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원전을 활용하고 있음. (블로터 2023.12.13) 최경미 기자  
또, AI를 사용해 미래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승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지난 6월 미국 최대 원전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음
- 이 합의에 따라 콘스텔레이션은 MS 데이터센터에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이 어려울 때 원자력을 제공함
- MS는 지난 6개월 동안 SMR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테라 프락시스와 협력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해 왔음. MS 측은 코딩을 제공하고, 테라 프락시스는 원자력 규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함

## 2. 엑손모빌, 투자 늘려 석유 생산 확대한다

- 셰브론과 함께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인 엑손모빌이 6일(현지시간) 앞으로 4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저탄소 에너지 부문도 강화하기로 함 (파이낸셜뉴스 2023.12.7) 송경재 기자
- 엑손모빌은 내년에 자본·탐사 비용지출을 230억~250억달러(약 29~32조원)로 늘리고, 2025~2027년에는 이를 220억~270억달러(약 28~35조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 저탄소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2022~2027년 6년 동안 저탄소 프로젝트에 모두 200억달러(약 26조원)를 투입할 계획임

## 3. 테슬라 사이버트럭, 미 연방정부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로 공식 승인

-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미 연방정부의 2023년 세액 공제 대상 전기차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인사이드이브이에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함 (베타뉴스 2023.12.11) 우예진 기자
- 2023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미 에너지부 국세청 정보에 사이버트럭 전륜구동 버전(AWD)과 최고급 트라이모터 사이버비스트 버전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구매자는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됨
- 2025년 출시 예정인 후륜구동 버전은 아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 4. 르노, 닛산, 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 전기차 공동 개발

- 프랑스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가 6일 자본 관계를 재검토한 후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12.7) 성일만 기자
- 세 회사는 유럽, 남아메리카, 인도 및 기타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의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세 회사는 지역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연계를 확인하고, 중남미에서 르노와 닛산이 공동 개발한 새로운 픽업트럭을 선보였음

## 5. 애플 ‘밀착’ 타타, 인도에 대규모 아이폰 공장 건설

- 인도 대기업 타타그룹이 인도 최대 규모의 아이폰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아주경제 2023.12.8) 윤주혜 기자
- 익명의 소식통은 타타가 타밀나두주 호수르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함
- 이 시설은 20개의 조립 라인을 갖출 예정이며, 2년 이내에 약 5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됨. 타타는 12~18개월 안에 시설을 가동하는 게 목표임

## 1. SK에코플랜트,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선점 “총력”… 중국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 SK에코플랜트는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음
- 이번 프로젝트는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과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인 지사이클이 협력해 2단계로 나눠 진행함
- 이번에 준공된 1단계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하며, 연면적 8000㎡ 규모로 연간 2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함
- 인근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전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이며, 2024년 말 준공 시 연간 총 4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됨
- SK에코플랜트는 이번에 구축하는 옌청 공장과 기존 상하이 공장 간 연계를 통해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스마트투데이 2023.12.13) 이재수 기자

## 2. LG화학,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착공… 북미 전지 소재 시장 본격 공략

-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2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 착공식은 오는 19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임
- LG화학은 이번 착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임. 이번에 착공하는 양극재 공장은 총 투자금액 32억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임
- 1단계로 2025~2026년 연간 6만톤(t)을 확보하고, 고객사 수요를 보며 생산라인을 늘릴 계획임
- 이후에는 연간 12만톤(t)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됨.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12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최대 규모임

(글로벌이코노믹 2023.12.12) 홍정화 기자

## 3. SK, 탄소배출권 거래 위해 亞 첫 연합체 구축

- SK그룹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EPCM) 연합’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음
- 협약식에는 SK(주), SK E&S, 에코시큐리티, 신한투자증권, PwC컨설팅,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음
- EPCM은 인증센터가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명목으로 환경보호크레딧(EPC)을 발행하면 탄소배출 기업(수요자)이 EPC를 구매하는 방식임
- 업무협약 참여자들은 내년 EPC 최초 발행을 공동 추진함. 또 △수소 생산 △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12개 유망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EPC의 발행 및 거래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동아일보 2023.12.11) 변종국 기자

## 4. 삼성엔지니어링, 깐터시 폐수처리장 사업으로 베트남 수처리 시장 공략 본격화

- 베트남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깐터시는 지난 10일(현지시간)에 열린 도시 개발 컨퍼런스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폐수처리장 사업을 포함한 총 44건의 투자 협력 의향서(MOC)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이 의향서는 깐터시와 삼성엔지니어링 간에 3조500억동(약 1656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MOC 체결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은 깐터시의 폐수 처리장에 대한 기본 설계 및 건설 업무를 맡음
- 삼성엔지니어링은 깐터시 폐수처리장 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수처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향후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수처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이코노믹 2023.12.11) 홍정화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2.8(금) ~ 2023.12.14(목)

제공일시 2023.12.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 COP28, 화석연료 ‘퇴출’ 아닌 ‘전환’에 합의… 아랍에미리트회의, “화석연료 퇴출은 서방의 이중잣대”

(임팩트는 2023.12.14) 이재영 기자

- COP28의 핵심 안건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아닌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에 합의했다고 선언했음
-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은 산유국과 비(非) 산유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한 안건으로 COP28을 연장전까지 가게 한 핵심 의제임
- 11일(현지시각) 의장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작성해 공유한 COP28 합의문 초안에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실천할 수 있는 8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 중에는 ‘2050년 이전 또는 그 즈음 순제로 달성을 위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하게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음
-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저감이 언급된 것은 역사상 처음임
-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져 거센 비판이 제기됐음. EU, 미국, 기후 재난에 취약한 작은 섬나라들 등 100여개 국가는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퇴출을 명시하고자 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심의 산유국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한 것임
-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식은 작년보다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음. 태평양 제도 기후 행동 네트워크(PICAN)와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이 11일(현지시각) 배포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COP28 참여국가 중 127개국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요구하거나 승인했음. 이는 1년전 80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실제로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협상 중인 새로운 초안은 11일(현지시각) 발표된 이전 초안보다는 훨씬 선연적인 것으로 보임. 기존 초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했다면, 새로운 초안은 국가들이 그러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음
- 또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줄일 것”이라는 기존 초안의 문구도 “과학에 따라 205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화석연료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변경됐음
- 한편, 11~12일(현지시각) 열린 제12차 아랍 에너지 회의(Arab Energy Conference)는 폐막 성명에서 생산 수준을 유지 및 추가 생산 능력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등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음
- 쿠웨이트의 사드 알 바라크 석유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회의에서 “서구 국가들이 경제적 장악을 위해 석유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고 탐욕스럽고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부를 약탈한 서방이 인류 환경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기후 협약을 통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음
- 아랍 국가들은 기후 문제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 및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의견을 모았음